

정동영 정책공약 비교해 보니 이명박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가 16일 서울 청계천 평화시장을 방문, 학창시절 어머니와 함께 옷가지를 만들어 낸 품목했던 평화시장 상인 아주머니들과 재회해 포옹하고 있다.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16일 오후 서울시 노원구 중평초등학교를 방문, 방과후 수업 현장을 둘러본 후 학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별없는 성장” “7%대 고성장”

‘함께 잘사는 한반도 경제’(정동영)
대 ‘대한민국 7·4·7’(이명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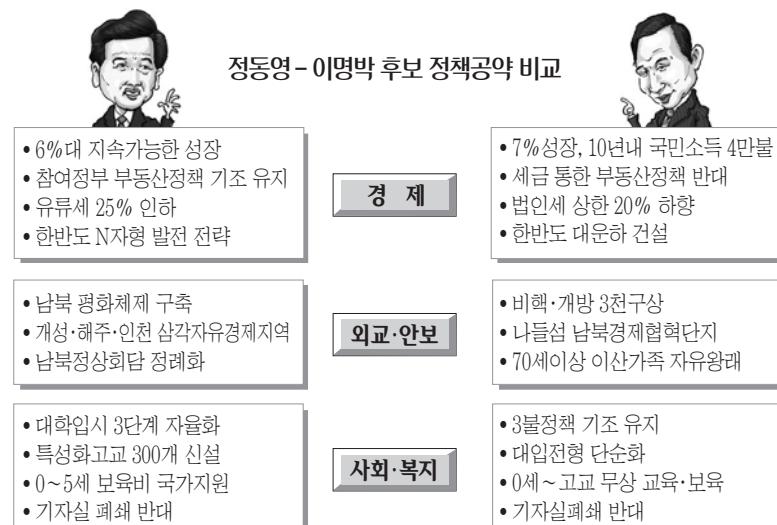
15일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로 정동영 후보가 확정됨에 따라 대선과도를 단독 짚고자 있었던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의 정책공약 대결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통일부 장관 출신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비교우위’를 주장하는 정 후보와 대기업 CEO(최고경영자) 출신으로 경제 분야에서 ‘경륜’을 강조하는 이 후보는 소속 정당의 색깔 만큼이나 정책공약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6%대 안정적 성장’ 대 ‘10년간 7% 고성장’은 ‘차별없는 성장으로 함께 잘사는 한반도 경제’를 경제분야 모토로 내건 정 후보는 지속가능한 6% 성장을 지향대로 서민과 중산층이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정책의 경우 참여정부의 부동산세제 근간을 유지하면서 주택 가격 안정과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며 세금을 걱정할 것으로 쓰자는 ‘세금론(用稅論)’을 내세워 한나라당의 감세론에 맞서고 있다.

그는 특히 경제공약에도 개성공단 2 단계 확장, 대류철 연결,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N자형 발전 전략 등을 내세우며 ‘평화이슈’를 강조하는 게 특징이다.

이에 비해 이 후보는 좀 더 적극적인 성장론을 내놓고 있다. 대표 비전인



鄭 통일·평화 이슈, 李 경제분야 경륜 강조

교육정책 상반…기자실 폐쇄 반대 한목소리

‘대한민국 7·4·7 구상’을 통해 정 후보 보다 1%포인트 높은 ‘7% 성장률’ 목표치를 제시했으며 10년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을 세계 7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란 장기 과제도 내놨다.

부동산정책은 기본적으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비판적 인식하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서민 세금부담과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겠다는 입

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체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국운 증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평화협정시대 개막’ 대 ‘비핵개발 3천구상’=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장을 면담, 9·19 공동성명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 후보에게 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

은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분야다.

그가 내걸고 있는 외교·안보 공약은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압축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평화선언→4·자간 평화협정 체결→북미·북일 수교→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자유경제지역 발전, 남북정상회담 연례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인 ‘MBC(엠비)독트린’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국민소득 3천달러로 높아지는 ‘비핵·개방 3천구상’이 핵심이다.

◇‘3불정책’ 상반된 견해=정 후보와 이 후보가 가장 의견이 맞서는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정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不)’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북지분야에서는 정 후보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공약을 내놓았고 이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와 이 후보가 모두 기자실 폐쇄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연합뉴스

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체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국운 증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평화협정시대 개막’ 대 ‘비핵개발 3천구상’=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장을 면담, 9·19 공동성명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 후보에게 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

은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분야다.

그가 내걸고 있는 외교·안보 공약은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압축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평화선언→4·자간 평화협정 체결→북미·북일 수교→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자유경제지역 발전, 남북정상회담 연례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인 ‘MBC(엠비)독트린’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국민소득 3천달러로 높아지는 ‘비핵·개방 3천구상’이 핵심이다.

◇‘3불정책’ 상반된 견해=정 후보와 이 후보가 가장 의견이 맞서는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정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不)’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북지분야에서는 정 후보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공약을 내놓았고 이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와 이 후보가 모두 기자실 폐쇄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연합뉴스

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체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국운 증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평화협정시대 개막’ 대 ‘비핵개발 3천구상’=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장을 면담, 9·19 공동성명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 후보에게 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

은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분야다.

그가 내걸고 있는 외교·안보 공약은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압축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평화선언→4·자간 평화협정 체결→북미·북일 수교→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자유경제지역 발전, 남북정상회담 연례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인 ‘MBC(엠비)독트린’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국민소득 3천달러로 높아지는 ‘비핵·개방 3천구상’이 핵심이다.

◇‘3불정책’ 상반된 견해=정 후보와 이 후보가 가장 의견이 맞서는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정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不)’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북지분야에서는 정 후보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공약을 내놓았고 이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와 이 후보가 모두 기자실 폐쇄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연합뉴스

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체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국운 증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평화협정시대 개막’ 대 ‘비핵개발 3천구상’=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장을 면담, 9·19 공동성명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 후보에게 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

은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분야다.

그가 내걸고 있는 외교·안보 공약은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압축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평화선언→4·자간 평화협정 체결→북미·북일 수교→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자유경제지역 발전, 남북정상회담 연례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인 ‘MBC(엠비)독트린’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국민소득 3천달러로 높아지는 ‘비핵·개방 3천구상’이 핵심이다.

◇‘3불정책’ 상반된 견해=정 후보와 이 후보가 가장 의견이 맞서는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정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不)’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북지분야에서는 정 후보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공약을 내놓았고 이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와 이 후보가 모두 기자실 폐쇄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연합뉴스

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체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국운 증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평화협정시대 개막’ 대 ‘비핵개발 3천구상’=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장을 면담, 9·19 공동성명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 후보에게 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

은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분야다.

그가 내걸고 있는 외교·안보 공약은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압축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평화선언→4·자간 평화협정 체결→북미·북일 수교→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자유경제지역 발전, 남북정상회담 연례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인 ‘MBC(엠비)독트린’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국민소득 3천달러로 높아지는 ‘비핵·개방 3천구상’이 핵심이다.

◇‘3불정책’ 상반된 견해=정 후보와 이 후보가 가장 의견이 맞서는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정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不)’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북지분야에서는 정 후보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공약을 내놓았고 이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하고 있다.

이밖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정부의 취재선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정 후보와 이 후보가 모두 기자실 폐쇄 조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나타낸 바 있다.

/연합뉴스

장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이밖에 한반도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체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국운 증설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선보였다.

◇‘평화협정시대 개막’ 대 ‘비핵개발 3천구상’=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5년 6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장을 면담, 9·19 공동성명의 기초를 마련했던 정 후보에게 있어 통일·외교·안보 정책

은 남다른 애착이 가는 분야다.

그가 내걸고 있는 외교·안보 공약은 궁극적으로 남북 평화협정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압축된다.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가 ‘남북평화선언→4·자간 평화협정 체결→북미·북일 수교→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바탕으로 한 평화체제 구축’의 단계로 진행된다는 로드맵이다. 구체적으로 개성·해주·인천을 잇는 삼각자유경제지역 발전, 남북정상회담 연례화 등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후보의 외교·안보 정책공약인 ‘MBC(엠비)독트린’은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자발적으로 개방할 경우 국제공조를 통해 국민소득 3천달러로 높아지는 ‘비핵·개방 3천구상’이 핵심이다.

◇‘3불정책’ 상반된 견해=정 후보와 이 후보가 가장 의견이 맞서는 분야는 교육정책이다. 정 후보의 경우 참여정부의 ‘3불정책(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금지)’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기여입학제를 제외한 ‘2불(不)’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북지분야에서는 정 후보가 ‘0세부터 고교까지 무상 교육·보육’ 공약을 내놓았고 이 후보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비 전액 국가부담’을 약속하고 있다.